

ITU 이사회



김기제 | 방송통신위원회 국제기구과 ITU/APT 담당
박중봉 | TTA 표준화본부 표준총괄팀장

1. 머리말

지난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ITU 본부에서 2009년도 ITU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금번 이사회는 2010~2011년 예산을 심의·승인하는 예산 이사회 임과 동시에 2010년 ITU 전권회의 준비를 위한 이사회로서 370여 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제네바 대표부를 비롯하여 전파연구소(RRA),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TTA, 한국전파진흥원(KOR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위촉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국가대표가 참석했다.

이사회는 헌장(Constitution) 제10조와 협약(Convention) 제4조에 의거,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두 전권회의 사이에 ITU의 전반적인 관리와 행정을 감독
- 새로운 전략계획 초안을 준비하고, 사무총국 및 각 부문의 운영계획(operational plan) 채택
- ITU의 인사규칙과 재정규칙 및 필요한 그 밖의 규칙을 승인하고 개정
- 사무총국 및 각 부문국의 주요 조직 변경에 관한 제

안 결정

- 직급 및 직제를 포함한 ITU 직원 채용에 대한 지침 제시
- ITU의 2년 단위 예산을 심의·승인
- ITU의 컨퍼런스 및 총회 개최 일정을 조정
- 현장, 협약, 업무규칙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ITU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조치

금번 이사회는 예년과는 달리, ITU 마크, 국제전기통신규칙 등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의 의제가 많이 다루어졌다. 본 고에서는 표준화와 관련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주요 결과

2.1 2010~2011년 예산 승인

ITU는 2년 단위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 이를 심의하는 격년 단위의 예산 이사회에서는 사무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장시간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금번 이사회에서는 세계 경제위기를 고

려하여 분담금 단위당 금액을 동결(단위당 318,000 스위스 프랑, 한화 약 3.7억 원)하고 역대 최소인 이전 예산의 3% 증액을 사무국이 제안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회계기준인 IPSAS(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국제공공기관 회계표준)의 원활한 적용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승인된 향후 2년간(2010~2011)의 예산은 총 332,6백만 스위스 프랑(한화 약 3,836억 원)으로 상세 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 2010~2011년 예산 내역

[단위 : 천 스위스 프랑]

구분	2010년	2011년	2년 (2010~2011)	비율(%)
사무총국(GS)	93,255	88,089	181,344	54.5
무선부문(R)	33,094	32,909	66,003	19.8
표준화부문(T)	12,872	13,298	26,170	7.9
개발부문(D)	30,050	29,072	59,122	17.8
계	169,271	163,368	332,639	

2.2 인터넷 공공정책 그룹 신설 및 IPv6 주소자원 할당

연구 승인

WISA 결의 75¹⁾의 후속조치로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추진을 위한 ITU 역할 강화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공정책 관련 그룹 신설이 제안되어 이사회와 WSIS 작업반 산하에 '인터넷 공공정책 그룹(Dedicated Group in identifying Internet-related Public Policy Matters)'이 신설되었다. 동 그룹은 인터넷 거버넌스, 다국어 도메인, 스팸 등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를 확인하여 차년도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는 ITU의 개도국 회원국을 중심으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한 주도권을 IGF나 ICANN에서 ITU로 가져오고자 하는 오랜 논의의 결과로 인지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동 사항에 반대했으나, 동 그룹이

인터넷 공공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조직이 아닌 관련 문제를 발굴하고 각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차원으로 역할 범위를 설정하고 그룹 설립에 협조하였다.

아울러, WISA 결의 64²⁾ 이행을 위해, IPv6 주소자원 분배 및 등록에 있어서의 ITU의 역할을 강화하고, 특히 개도국을 위해 일부 IPv6 주소자원을 유보하고 추후 할당할 것을 연구하는 그룹을 표준화국(TSB)의 주도로 개발국(BDT)과 협력하여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등 선진국이 기존의 주소 등록 및 분배 시스템(Regional Internet Registry 포함) 활동 외 ITU의 추가적인 활동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ITU가 주소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추진해야 한다는 개도국의 주장에 밀려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또한 ICANN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주소 등록 및 관리에 있어 개도국의 이해를 반영해 줄 수 있는 ITU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2.3 국제전기통신규칙 검토를 위한 세계전기통신회의

개최 준비 착수

국제전기통신규칙(ITR)은 ITU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이다. ITR은 통신요금 국제정산에 있어서의 원칙을 다루는 ITU의 업무규칙으로서, 선진국은 통신 시장 민영화 이후 동 요금 정산이 개별 사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더 이상 국제 조약 기반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관련 규칙은 폐지 또는 사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도국들은 자국 내 통신산업이 여전히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으며, 개별 사업자 간의 협정 시 개도국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ITU가 적절한 원칙

1) WISA 결의 75: WSIS 결과 이행에 있어서의 ITU-T의 기여와 WSIS 이사회 작업반의 핵심 부분으로서의 인터넷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한 전담반 설립

2) WISA 결의 64: IP 주소 할당과 IPv6 보급 촉진

을 세워줄 것을 주장하여 관련 규칙의 현행화를 주장해 오고 있다. 이에, 2006년 전권회의에서는 관련 ITR 검토 착수를 결정하여, 표준화국 산하에 ITR 관련 조문 검토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어 운영된 바 있으며, ITR의 현행화를 위한 신규기술의 검토를 위한 세계전기통신정책포럼(WTPF)이 2009년 4월 개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전기통신회의(WCIT)를 개최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인지되어 왔으나, 그 준비를 하는 시점이 2010년 전권회의 이후나 그 전 이사회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였다. 선진국은 ITR 조문 개정에 대한 ITU 전 회원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2010년 전권회의 이후 시점을 선호하였으나, 개도국은 관련 작업의 조기 착수를 선호하였다. 금번 이사회의 의장(가나 정보통신부 장관)은 개도국의 지지를 배경으로 WCIT 개최 준비를 위한 이사회 작업반을 신설할 것을 결정함으로써, 전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해, 2012년 WCIT 전까지 4~6차례 가량의 준비회의와 지역준비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ITR의 개편 작업은 일부 선언적 조항을 현장·협약으로 이관, 기술적인 사항은 ITU-T 권고 개발 등으로 폐지하거나, 신규 기술을 포함하여 현행화하는 등의 다각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제는 한국도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별 사업자들의 요금 정산에 있어 불리한 원칙이 제정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2.4 학계의 ITU 활동 참여

WTSA 결의 71³⁾은 학계가 ITU-T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정적인 부담 감감을 위한 최소 분담금 단위수를 낮출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이에 금번 이사회의에서는 동 사항이 긴급하다는 것에 대해 전

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현장·협약 일치 여부, 대학 부설연구소에 대한 용어의 정의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한국은 2008년 ITU-T 회의에 참여한 258명 중 88명(34%)이 대학교수임을 지적하며, 학계 회원제에 대한 FINREG^(Financial Regulations and other related Financial Management Issues)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미국은 대학교수를 통한 연구 요청 및 이에 대한 펠로십(fellowship) 제공 등을 위한 시범운영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FINREG와 사무총국은 3개 부문 사무국과 협력해 재정적 합의 및 용어 정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2.5 ITU 마크 프로그램⁴⁾

ITU 마크 프로그램은 ITU 권고에 준하여 구현된 제품 및 서비스에 ITU 마크를 부여하는 시험·인증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동 사항은 자체의 시험인증 체계를 갖추지 못해 자국 내 통신 시장에 외산 장비를 조달할 경우 ITU 마크가 적합성과 상호운용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개도국의 믿음과 신규 수입원과 인지도 향상이라는 ITU의 이해가 일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표준과의 정합성만으로는 상호운용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경험과 자국 내 산업체의 시험·인증 관련 추가 경비 발생가능성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해 왔었다.

표준화국은 WTSA 이후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합성평가 개별 국가 내의 규제적인 이슈와 연계된 것이며, 시험·인증기관의 인정과 관련된 복잡한 절차, 지속적인 관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ITU 마크 프로그램이 아닌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및 서비스 정보를 ITU의 DB에 등록하는 우

3) WTSA 결의 71: 학계, 대학 및 부설 연구기관의 ITU-T 활동 참여 허용

4) WTSA 결의 76: 적합성 및 상호운용성 시험 개도국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가능한 미래 ITU 마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회적인 형식으로 관련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하여 금번 이사회에 보고했다.

이에, 많은 선진국들은 ITU 마크의 전면 시행이 아닌 DB화 추진 방안 제안을 적극 지지하고, 향후 이하의 단계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와 진행을 요청했다.

- 1단계: 개도국의 상호운용성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확인
- 2단계: 산업체 및 타국(BDT, BR) 등 이해관계인과의 추가 협력
- 3단계: 예산 사항 등을 포함한 비즈니스 플랜의 개발

3. 맺음말

금번 이사회는 예산 이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 및 승인은 용이하게 진행되는데 반해, 상기와 같이

정책적인 이슈들이 주로 논의되었다. 특히, 2010년 전권회의 선거를 앞두고, 임기를 마감하는 무선통신국(BR) 국장자리에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이 후보를 내면서 홍보전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한국은 2014년 전권회의 유치를 위해 개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홍보, ITU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한 개최도시 선정절차 등에 대한 협의 그리고 터키, 멕시코 등 전권회의 유치 경험이 있는 국가대표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주최국 협정을 위한 사전 검토 작업을 병행하였다.

차기 이사회는 2010년 4월에 개최되며, 동 이사회는 전권회의 이전 최종 이사회로서 관련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이사국 및 선출직 후보에 대해 사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아울러 WCIT 준비작업반, FINFEG 등 이사회 산하 작업반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TTA**



정보통신용어해설

CdTe 박막 태양전지

Cadium, Teluride, Thin Film Solar Cell, -薄膜太陽電池 [반도체]

카드늄, 텔루라이드 화합물로 만든 박막형 태양전지.

제조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카드뮴은 희소원료로 태양전지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 곤란하며, 공해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